

AI가 앞당긴 기본소득사회… 고용·소득 구조 대전환 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세미나

강남훈 “AGI 확산, 기본소득 필요”
고용 불안 확대, 중산층 약화 경고
과세·국가배당 재원모델·커머닝 제시
‘햇빛소득’ 사례·데이터 주권도 거론

인공지능(AI)이 산업과 고용 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 국가차원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축으로 한 ‘AI 기본사회’ 구상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스퀘어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세미나를 열고, AI 시대의 고용 해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AI기본사회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기도 하다.

강남훈 교수는 “기술 혁명 자체는 일자리를 줄이지만, 이에 대한 시민·정치의 운동과 복지 국가 모델이 결합되어 고용을 창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AI로 인한 산업혁명의 경우, AGI(인공 일반 지능)는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면 AI시대에도 완전고용에 가깝게 고용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고용의 절반 이상이 불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스퀘어 16층에서 ‘AI는 기본사회를 어떻게 재설계하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AI기본사회에 대한 발제를 하는 모습.

정한 일자리”라며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AI에 의해 기술적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화이트칼라가 해체되면서 실업자의 대부분이 육체노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소득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러한 대분기에서 발전 경로에 올라선 나라의 특징으로 ‘포용적 경제’를 꼽은 연구를 소개했다.

교육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교육뿐 아니라 연구의 역할로서도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고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 하에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커머닝(Commoning)’에 대해 설명하며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

다. 커머닝은 ‘공유화한다’라는 뜻으로, 모두의 것을 모두의 것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다. 허버트 사이먼 모델은 모든 소득에 70% 세율로 과세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제임스 미드 모델은 국가가 지분 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그는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의 “미래에는 kWh가 화폐 단위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국내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전환(AX)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속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참석자는 전환기에 고용의 전환 준비 방식과 소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남훈 교수는 태양광 등의 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 이미 계획과 진행 중에 있다며 예를 들었다. 영광군은 2038년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1년에 30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여주시 구양리는 ‘햇빛소득마을’로,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그 수익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다른 참석자는 화폐의 개념 변화에 대해 질문했다. 강 교수는 공감한다면서

도, “어디까지나 화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 주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 실현 방법과, 국제적인 사회적 펀드 조성 동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강 교수는 “알고리즘도 공유재산”이라고 답했다. 요컨대 인터넷, 데이터, LLM 모델 등이 인류 공공의 오픈 소스로 구성되었기에 공공재로 본다는 설명이다. 그는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전환기에는 소유권과 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긴다”며 “이 때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자도생’이 심각한 현상 속에서 커머닝을 어떻게 국민에게 설득할지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국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더 많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metroseoul.co.kr

정부 ‘생산적 금융’ 전환 기술금융 3년 만에 반등

기술신용대출 잔액 319조1068억
은행권, 중소·벤처 기술기업 지원 확대

은행권의 기술금융 잔액이 3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술금융은 기술력과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나 재무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대출, 투자, 보증)하는 금융서비스다. 2014년에 도입한 이 서비스는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TCB)가 해당 기술의 완성도와 시장성을 평가해 대출 한도 확대나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19조1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말 302조7538억원과 비교해 16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별로 보면 특수은행 가운데서는 기업은행이 130조3576억원으로 가장 많은 잔액을 기록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42조877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이 8조33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술금융잔액은 2022년 326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 왔다. 2023년 304조 5000억원, 2024년 302조 8000억원으로 연이어 하락했다. 이는 2022년 말부터 본격화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데다, 금융당국이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대출문턱을 높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신성장 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주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달 열린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에서는 민간과 정책금융을 포함해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분야에 총 124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기조 변화가 은행권의 기술금융 확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들은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관련분부를 재편해 유망기술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생산적 금융 중심의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기업발굴·성장지원 등을 수행하는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첨단전략산업 전담 심사부서(첨단전략산업심사UNIT)를 운영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고객을 위한 한화생명의 합리적 통보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무)

● 한화생명 알리미

건강할수록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이제 **무사고 전환**을 통해
매년 **보험료를 할인받으세요** 🎁 ✨



한화생명



피트니스



건강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무)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전환 신청시 현재 연체된 보험료가 없는 유효한 계약 ②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한 계약 ③해당 계약의 기초 서류에서 정하는 간판가입형인 계약(단 ‘간판가입형(10년)’은 제외) 혹은 해당 계약의 기초 서류에서 정하는 일반가입형 또는 건강가입형인 계약(단 ‘건강가입형(10년)’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판가입형 상품은 일반심사보험 또는 건강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습니다.(다만, ‘간판가입형(10년)’의 경우 일반심사보험 대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일부 강화한 항목이 있어 일부 담보에서는 보험료가 낮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 또는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1년 이후 발생 시에 지급되는 금액의 50%(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80일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25%)만 지급합니다.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 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6-00425호 (2026-01-22 ~ 2027-01-21)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6-01-004

홈페이지 : www.hanwhalife.com 상담 번호 : 080.365.6363